



수신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신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문의	경제정책팀 (권오인 팀장, 정택수 간사 / 02-3673-2143)
일자	2017. 02. 02(목)
제목	[보도]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회는 「전경련해체촉구 결의안」을 즉각 처리하라!

- 2월 임시국회에서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국회는 전경련 해체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의무이다!

1.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을 주도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우회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나자 전경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절정에 이르고 있다. 민의에 따라 이연주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작년 10월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각각 발의하였는데, 해를 넘긴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0대 국회의원 300인에게 제출하였다.
2. 이연주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결의안은 전경련의 계속된 정경유착 행위가 한국경제와 정치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러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전경련의 자발적인 해체 및 정부-전경련의 정책협의 중단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심상정 의원 결의안은 전경련의 자진해체와 함께 정부로 하여금 전경련 법인등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심상정의원안이 전경련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은 안으로 판단한다.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경련이 창립목적에 위배하여 정권과 유착한 결과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의 발전도 크게 저해되었다고 판단한다.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전경련이 자발적인 해체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가 폐쇄조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4. 국정농단 사태를 맞으며 사회전반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가 조기대선 분위기에 휩싸여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정경유착 부패 근절을 통해 건전한 경제발전을 제고시켜야 할 국회 본연의 의무와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국회는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잊지 말고 ‘전경련 해체’라는 민의를 수용하여 2월 임시국회동안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

◎ 별첨 :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촉구 국회 결의안에 대한 의견서

#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서

## 제출 배경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정관 제 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구현과 우리경제의 국제화 촉진”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그러나 전경련은 설립목적을 위배하고 각종 정경유착사건을 주도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혔음. 작년에는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우회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를 주도한 사실이 연거푸 드러나면서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민의에 따라 이언주의원과 심상정의원이 각각 전경련 해체 촉구 국회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태임.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전경련 해체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함.

### 1 전경련 연루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

<표1> 전경련 관련 정경유착·정치개입사건 일지

연도	사건명
1988년	일해재단 자금 모금
1995년	노태우 전대통령 대선비자금제공 사건
1997년	불법대선자금 세풍 사건
2002년	불법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2011년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 문건 사건
2012년	국회의원 자녀 대상 캠프 추진
2016년	어버이연합 자금 우회지원
2016년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2017년	보수단체 지원 추가 의혹 제기 중

- 1961년 창립된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하지만 전경련은 설립목적과는 달리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에서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해옴.
- 정경유착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고질로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여 양극화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함. 이제 양극화·불평등 문제의 해결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우리사회의 중대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럼에도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우회지원하여 관제데모를 주도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통해 정경유착의 적폐를 재현한 것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대흐름에 역행한 중대한 사건임.

- 전경련이 또 다시 정경유착 저지른 사실은 그간의 과오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음을 반증함. 지난해 10월에는 경제·경영전문가 312인이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광장에 모인 시민들도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고 있음. 국민여론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주요 회원사들마저 회원탈퇴나 활동중단을 선언하여 전경련은 더 이상의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 2 전경련 및 회원사 동향

- 12월 6일 국정농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재벌총수 중 삼성, 현대차, LG, SK의 총수가 전경련 탈퇴의사를 밝힘. 이 후 LG와 KT가 가장 먼저 회원탈퇴를 공식선언 하였으며, 그 외 주요 회원사들도 회비납부 중단 및 활동중단을 선언함.

<표2> 전경련 주요 재벌 회원사 현황

일시	내용
12. 06	국정농단 청문회 중 삼성, 현대차, LG, SK의 총수가 전경련 탈퇴의사를 밝힘
2016.	12. 15 전경련 쇄신논의 간담회 개최 - 삼성, 현대차, SK, LG, 한화 등 주요 그룹 불참
	12. 27 LG, KT 전경련 탈퇴 공식선언
	12. 28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승철 부회장 2월 동반사퇴 의사 표명
12월 말	전경련 쇄신안 연구용역 발주(외부 회계법인)
2017.	01. 12 전경련 회장단 회의 개최 - 삼성, 현대차, SK, LG, 한화 등 주요 그룹 불참
	2월 중 전경련 이사회 및 총회 예정

## 3 전경련 자체 쇄신논의 사항

- 전경련은 해체를 모면하기 위해 쇄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쇄신논의를 국정농단 사태에 깊숙이 개입된 집행진이 주도하고 있어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낳음. 전경련은 2011년에도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쇄신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결과를 내놓지 않은 바 있음.
- 언론에 따르면 최근 전경련 쇄신안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하 BRT)모델’과 ‘헤리티지재단 모델’이 유력하게 논의됨. 전자의 경우 BRT가 기부나 재단 설립 등 사회협력활동을 하지 않

는 점을 참고하여 정경유착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임. 하지만 일부기능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정경유착 방법은 얼마든지 모색될 수 있음. 더욱이 BRT는 미국의 대표적인 로비단체로서 로비스트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음. 우리나라는 로비스트법 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로비단체를 모델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음.

- 전경련이 싱크탱크로 변신하더라도 정경유착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음. 싱크탱크는 전경련의 관행에 따라 재벌들을 위한 정책생산에 매진할 것이며, 이 정책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로비과정은 새로운 정경유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결국 쇄신논의는 해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전경련은 해체되어야만 함.

**<표 3> 언론에 보도된 전경련 쇄신모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헤리티지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200대 대기업 최고경영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이자 경제단체</li> <li>- 정부와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상대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함</li> <li>- 한국의 전경련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음</li> <li>- BRT는 기업의 목소리를 내는 데 집중할 뿐 기부나 재단설립 등 사회협력 활동은 하지 않으므로 전경련이 이를 모델로 하면 정경유착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국방, 복지, 기업 활동 보장, 미국 이익 방어 및 유엔과 아시아 및 APEC 회원국들에 관한 연구에 주력</li> <li>- 예산의 75%를 개인 기부로 운영</li> <li>-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중에는 학자보다 공화당의 정치 거물들이 대거 포진</li> <li>- 진정한 연구 단체라기보다 정책 홍보 단체라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li> </ul>

#### 4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주요내용 비교

**<표 4>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주요내용**

이언주 의원 외 21인 발의	심상정 의원 외 75인 발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회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한다고 내세우면서 실은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관치경제 실현, 우리 경제의 후진화에 앞장서 온 전경련의 자발적 해체를 촉구한다.</li> <li>2. 국회는 일해재단, 대선비자금 사건, 그리고 최근의 2011년 정치인 로비 그룹별 할당내부보고서 의혹, '어버이연합' 지원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 중 기업들에게 강제 할당을 하는 등 정경유착의 창구로 자리 잡고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며 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켜 온 전경련의 자발적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민국 국회는 개발경제 시기 고도성장에 나름의 역할을 했던 전경련이 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이 요청되는 시대에 더 이상 기여할 바는 없으며, 특히 정경유착의 폐습을 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와 경제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li> <li>2. 대한민국 국회는 권력과 결탁해 전경련이 모금과 설립을 주도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을 전형적인 정경유착, 즉 권력과 금력의 부적절하고 부당한 거래의 결과물로 인식한다.</li> <li>3. 전경련은 더 이상 두 재단의 향후 진로에 대해 관여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탈선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한편으론 사법당국의 수사에 적극</li> </ol>

3. 국회는 정부가 일부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정경유착의 창구로서 재벌·대기업들 위에 군림해온 전경련을 정부의 주요 회의에 참석시켜 파트너로 인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를 지속하여 경제민주화와 민주적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협조하고, 다른 한편으로 조속히 자진해서 해산절차를 밟아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적 시장경제 발전과 낮은 재벌주도 경제체제의 일대혁신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전경련에 대해 자진해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그에 앞서 관행적으로 가입된 공공기관을 즉각 탈퇴시키며, 정책 협의 중단 및 여러 가지 위·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경련 법인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 이연주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결의안은 전경련의 계속된 정경유착 행위가 한국경제와 정치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었는데 인식을 같이함. 그러므로 전경련의 자발적인 해체 및 정부-전경련의 정책협의 중단을 주장하고 있음.
- 다만, 심상정 의원 결의안은 전경련의 자진해체와 함께 정부로 하여금 전경련 법인등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전경련 해체를 위한 현실적인 안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정부는 전경련 해체 문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경련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정책수립에 있어 전경련을 정부회의에 참여시키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임.

## 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견

**첫째, 국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을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국회는 전경련 해체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의무이다.**

- 정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전경련이 정부와 재계 간에 소통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함. 하지만 정부와 재계의 소통창구 역할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조직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음. 전경련의 사례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대기업과 정부 간에 별도의 소통은 정경유착 가능성만 높임.
- 또한 헌법적 가치인 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 권력과 유착하여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전경련이

해체에 직면해서야 헌법 뒤에 숨으려 한다면 누구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전경련이 창립목적에 위배하여 정권과 유착한 결과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의 발전도 크게 저해되었음.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전경련이 자발적인 해체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가 폐쇄조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함. 이에 심상정 의원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맞으며 사회전반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국회가 조기대선 분위기에 휩싸여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민의를 저버리는 것임. 국회는 본연의 의무를 잊지 말고 민의를 수용하여 2월 임시국회동안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함.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